

미국의 경제위기와 저임금 고용

Annette Bernhardt (전미노동법연구프로젝트 정책본부장, 러셀세이지재단 방문연구원)

미국의 경제위기가 2009년 6월 사실상 끝났다고는 하나 이후에도 미국경제는 기껏해야 미온적 회복만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자리 증가는 미약하여 이전 2년간의 일자리 감소를 보충하거나 실업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벌써 수차례 하향 조정되어 향후 남은 기간의 성장률 전망은 1%에 불과하다. 더블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지어는 보수 경제신문과 잡지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경기침체시기 동안 미국에서는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현재까지는 19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을 뿐이다. 거기에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430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8월 현재 1,390만 명의 근로자가 여전히 실업상태이고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실업기간이 6개월이 넘는 장기실업자이다. 또한 840만 명의 근로자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불완전고용상태이다.¹⁾

1) 자세한 연구는 아래 보고서 참조.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Economy Faces Deficit of Over 11.0 Million Jobs," <http://www.nelp.org/page/-/UI/2011/nelp.jobs.deficit.july.2011.pdf?nocdn=1>; Economic Policy Institute, "Job Growth Still Sputtering in Lowest Gear," <http://www.epi.org/publications/entry/7417/>; and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Employment Rate Hits New Low as Economy Creates 117,000 Jobs in July," <http://www.cepr.net/index.php/data-bytes/jobs-bytes/employment-rate-hits-new-low-as-economy-creates-117000-jobs-in-july>

미국에 닥친 엄청난 고용위기로 인해 여러 세대의 근로자들이 구직난에 처하게 되었다. 나이가 든 제조업 및 건설업 근로자는 얼마 되지 않은 저축만을 가지고 조기 퇴직을 해야 하고, 일자리 없이 2년을 보내고 나면 재취업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흑인노동자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아직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률이 백인근로자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청년근로자는 노동시장의 긴 줄 맨 끝에 서 있는 셈으로 구직자 5명 중 1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주와 지역 일자리가 끊임없이 감소되고 있으며 연방 구조기금이 주정부로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참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고용위기 앞에 비틀거리고 있을 때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임금과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노동시장의 추세에 대해 수행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고용 증가는 특히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금이 높은 직종의 경우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바닥에 집중된 성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간임금직에서 일자리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추세가 합쳐져 이번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던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임금직의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미국 평균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경제위기 이후 정체상태인데 반해 저임금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하락폭도 상당히 컸다. 동시에 이들 근로자는 만연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위반을 비롯한 여러 저임금 산업의 고용 및 노동법 위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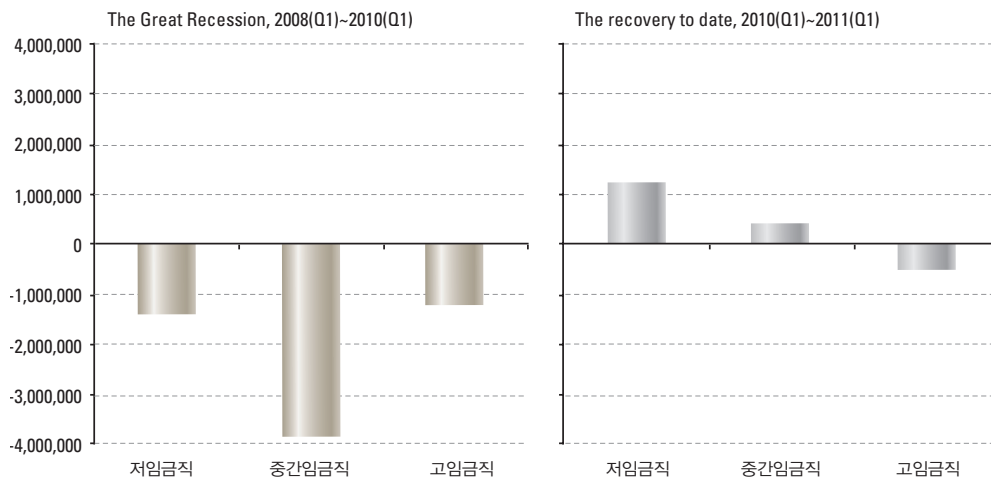
미국 뉴스에 귀 기울이고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경제현황도 암울하지만 정치적 여건은 그야말로 나락이라는 사실이 새롭지도 않을 것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 일자리나 임금위기를 해결하는 공공정책의 능력에 사실상 족쇄가 되고 있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극도의 정치적 기능장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최근 부채한도증액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희망은 미국 전역의 노조, 지역사회단체, 이민

자 권리옹호단체 활동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는 민중에게 찾을 수 있다. 진정 미국의 미래는 생활임금(living wage) 어젠다를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 경제위기와 그 이후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전미고용법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필자는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용추세를 저임금직, 중간임금직, 고임금직 등 3개 임금수준별로 나누어 들여다보았다.²⁾ [그림

[그림 1] 경제위기 전후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고용변화



2) 저임금직의 시급 중앙값은 7.51~13.52달러, 중간임금직의 시급 중앙값은 13.53~20.66달러, 고임금직의 시급 중앙값은 20.67~53.32달러(2011 dollar 기준). 자세한 방법론은 다음 보고서 참조.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The Good Jobs Deficit: A Closer Look at Recent Job Loss and Job Growth Trends Using Occupational Data," <http://www.nelp.org/page/-/Final%20occupations%20report%207-25-11.pdf?nocdn=1>

1]에서는 2008년 1사분기부터 이 3개 분류별 고용 추이를 추적해 보았다. 2008년 1사분기에 3개 분류가 미국 고용에서 각각 1/3을 차지하였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2008년 1사분기(미국 고용은 2008년 1월 최고치 기록)부터 2010년 1사분기(2010년 2월 최저치 기록)까지의 고용변화를 보여준다. 오른쪽 그림은 2010년 1사분기부터 2011년 1사분기(가장 최근 자료)까지의 고용변화를 보여준다.³⁾

결과는 놀랍다. 침체기 동안 고용감소는 노동시장 전체에서 발생하였으나 특히 중간임금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실 이 시기에 발생한 순고용감소 중 60%가 중간임금직에서 발생하였고 21%는 저임금 일자리, 19%는 고임금직에서 발생하였다. 반면 현재까지 저조한 회복만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증가는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고 중간임금직은 미미한 증가만이 있을 뿐이며 고임금직의 경우 순감소가 있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일자리 부족현상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임금직(경제위기 이전 고용의 4% 미만) 및 저임금직(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과 비교할 때 중간임금직(경제위기 이전 고용의 8% 미만)에서 일자리 부족현상이 가장 크다.

<표 1> 초기 고용 대비 비율로 본 미국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고용변화

	고용 침체기 (2008년1사분기~2010년1사분기)	고용 회복기 (2010년1사분기~2011년1사분기)	전체 변화 (2008년1사분기~2011년1사분기)
저임금직	-3.4%	3.2%	-0.3%
중간임금직	-9.5%	1.2%	-8.4%
고임금직	-2.9%	-1.2%	-4.1%
전 체	-5.3%	1.1%	-4.3%

자료: 인구조사데이터를 필자가 분석.

<표 2>에서는 현재까지 고용회복을 지배하고 있는 저임금직의 유형을 보여준다. 소매점원, 사무보조, 창고담당, 식당직원, 보육종사자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저임금직종이다.

3) 공식적으로 2009년 6월에 경기침체가 종료되었지만 미국 비농업고용은 2010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글에서 고용침체기는 고용이 줄어든 2008년 1월~2010년 2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고용회복기는 그 이후 고용이 늘어난 시기를 의미한다.

〈표 2〉 미국에서 고용 회복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한 저임금 직종

	고용 변화 (2010년 1사분기-2011년 2사분기)	시급 증감률 (2011 달러기준)
소매영업담당	281,523	10.72
사무보조	184,168	13.21
계산원	179,677	8.83
음식준비담당	148,436	8.84
창고담당 및 주문담당	142,197	10.82
조립공 철골업자	138,900	13.24
식당 종업원	102,301	7.51
보육노동자	92,353	9.60
조경노동자	87,615	10.87
요리사 주방장	78,784	12.82

자료: 인구조사데이터를 필자가 분석.

산업마다 성장률이 다르다는 점도 위 표를 뒷받침한다. 올 초 동료 연구원과 한 분석에서 소매업, 식음료 서비스업, 임시과견업, 홈케어, 요양원(Nursing Home) 등 저임금 산업이 최근 미국의 민간부문 일자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와는 대조적으로 임금이 높은 산업의 경우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성장이 빠르지 않은 편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경기침체의 특성 때문이다. 금융위기와 주택거품의 붕괴로 인해 건설, 금융, 보험, 부동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초래되었고 이렇게 임금이 높은 산업은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변수도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과 시대에 뒤쳐진 정보통신 산업(임금이 높은 산업)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의 영향력으로 임금이 높았던 주와 지역의 공공일자리 감소(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증가가 있었던 지난해에 오히려 이들 부문의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4) "A Year of Unbalanced Growth: Industries, Wages, and the First 12 Months of Job Growth After the Great Recession," <http://www.nelp.org/page/-/Justice/2011/UnbalancedGrowthFeb2011.pdf?nocd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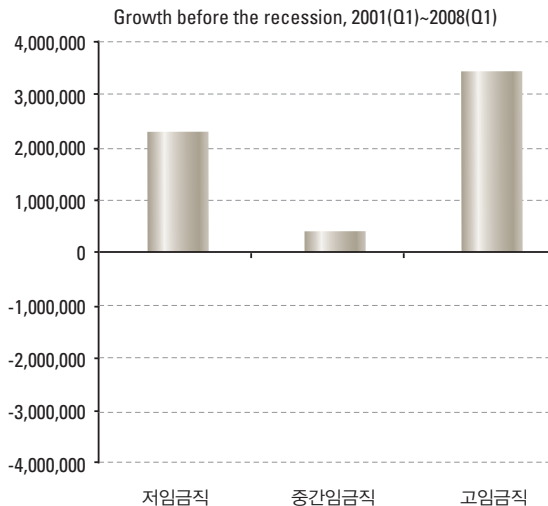
중간임금직 또는 고임금직의 고용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금은 고용회복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과연 지속될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미국 경기침체에 중간임금직이 지나치게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간임금직의 증가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저임금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근로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당면해 있다.

■ 경제위기 이전 고용증가의 양극화

경제위기 이전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 2]는 경제위기 이전 고용증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논리는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필자는 2001년 1사분기부터 2008년 1사분기까지 세 가지 직종군(2001년 1사분기 이들 세 가지 직종군은 미국 고용에서 각각 1/3을 차지)을

[그림 2] 경제위기 이전 임금수준별 근로자 고용변화



추적하였다.⁵⁾ 결과는 놀라웠다. 이 시기에 저임금직과 고임금직은 중간임금직보다 고용이 현격하게 빠르게 증가하였다. 사실상 이 시기 중간임금직은 순고용증가의 6%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필자가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이유는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침체 이전으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코앞의 목표에만 급급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2]는 이러한 단기목표를 성공시킨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이 줄어드는 모래시계형 체제라는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경제위기 이후 근로자 임금의 변화

미국의 직종 구성에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직종의 임금에도 변화가 있었다. <표 3>은 3개 직종별로 각각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임금 중앙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추세는 다음과 같다. 2008년 미국의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증가한 셈이지만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2008년 1사분기부터 2011년 1사분기까지 전체 기간을 보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질임금의 감소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저임금 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2% 이상 하

<표 3> 경기침체 이후 미국 근로자의 실질임금 중앙값의 변화

	실질임금 중앙값의 백분율 변화(2008년1사분기~2011년1사분기)
저임금직	-2.3%
중간임금직	-0.9%
고임금직	0.9%
전 체	-0.6%

자료: 인구조사데이터를 필자가 분석.

5) 미국의 고용은 2001년 2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1월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 기간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추세를 볼 수 있는 “peak to peak” 분석이 가능하다.

락하였으며, 고용회복기의 고용증가의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임금 직종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실질임금이 소폭 감소한 반면 고임금 직종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소폭 증가하였다.

■ 저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법과 노동법 위반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긴 하였으나 노동시장 저변에서 근로 조건을 새로이 형성하는 장기적인 추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는 탈노조, 임시직, 하도급, 그 밖에도 수많은 형태의 임시근로의 증가, 직업 안정성 감소, 사용자가 제공하는 의료 및 연금 혜택 감소 등이 있다.⁶⁾

안타깝게도 이제는 고용법과 노동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포함되었다. 2008년 필자는 다른 연구원,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국 작업장에서의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4,387명의 일선근로자에 대한 대표적인 표본을 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등록이주자, 현금 지급 근로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표본을 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Broken Laws, Unprotected Workers*에서는 미국의 3대 도시에서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을 위시하여 다양한 근로자가 겪고 있는 규제받지 않는 노동의 세계를 고발하였다.⁷⁾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본에 있는 근로자의 1/4 이상(26%)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 넘는 근로자 중 76%가 법에서 보장하는 추가근무수당을 지

6) 저임금 노동의 현황에 관한 최근 연구는 다음 보고서 참조. Bernhardt, Annette, Heather Boushey, Laura Dresser, and Chris Tilly (eds.) (2008), *The Gloves-Off Economy: Workplace Standards at the Bottom of America's Labor Market*, Cornell University Press.

7) *Broken Laws, Unprotected Workers: Violations of Employment and Labor Laws in America's Cities*, 2009, available at www.unprotectedworkers.org

급받지 못하였다.

- 근로시간 개시 전 또는 이후 일하는 근로자 중 70%가 “보상 없는 근무(off the clock)” 위반을 겪고 있었다. 정규 교대시간 외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 식사시간을 제공받아야 하는 근로자 중 69%가 식사시간이 전혀 없거나 사용자의 방해로 받았거나 식사시간 중에 근무를 하였다. 이는 모두 식사시간 제공 법을 위반한 것이다.
- 표본에 있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57%)이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소득 및 공제 일람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41%는 임금의 불법 공제가 있었다.
- 팁을 받는 근로자의 30%가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사용자에게 고충을 제기했거나 노조를 결성하려 했던 근로자 중 43%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임금삭감 등과 같은 보복을 당했다.

전체로 볼 때 해당 연구를 통해 표본의 68%가 직전 주에 적어도 1건 이상의 임금관련 위반 사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는 전체 연소득 17,616달러 중 해마다 평균 2,634달러를 상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득의 15%에 달하는 임금갈취이다. 시 단위로 보면 3대 도시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약 110만 명의 근로자가 1주일에 적어도 1건 이상의 임금 관련 위반사례를 겪고 있으며, 이는 주당 5,640백만 달러 이상의 임금상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은 작업장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지하경제나 일부 잘 나쁜 사용자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저임금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소매업, 식당, 식료품점; 흡케어나 보육과 같은 간병업무; 건설, 식품제조, 의류제조, 창고업, 트럭운전; 세차, 세탁, 미용, 네일 등 개인서비스; 건물관리, 경비와 같은 건물관리서비스업에서 노동법 위반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2008년 1사분기에 실시되었다. 이후 노동법 위반사례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최신 근거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보호센터나 지역사회단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침체를 악용하여 더욱더 근로자를 쥐어짜는 사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저임금 일자리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결정과 미국 노동시장의 노동비

용제어 전략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폭넓게 보면 그간 미국의 연구자들이 생활임금, 사용자가 제공하는 혜택, 고용 안정성, 승진 등과 같은 규범적 작업장 기준의 하락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경제구조조정과 관련된 작업장관련 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미국 공공정책의 실패

미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면 상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미국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먼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실업급여 유지 승인을 위해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고, 최근에는 부채한도 연장 문제도 있었다(정부가 경제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내帛정책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미국정부는 실행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비슷한 것도 하나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와 임금 하락은 정치적 담론의 레이다 망에도 걸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아주 좋을 때에도 미국에서는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 감소라는 암울한 전망 앞에서 곧 설 곳을 잃고 만다(저임금 산업의 수익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상황은 너무도 악화되어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가 일종의 부양책으로 예고되고 있는 형편이다(일례로 맥도날드가 지난 봄 전면적인 채용에 나섰다 발표했을 때). 또한 경기침체를 기회로 삼아 노동계약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칭찬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일례로 버라이즌(Verizon)이 주가 대비 우수한 실적발표를 하면서도 노조에 대폭 양보를 요구).

몇몇 사분기의 경우 정책 목표는 노동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올 초에는 위스콘신에서의 시위로 주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철폐하거나 철회하자는 움직임이 고발되었었다.⁸⁾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미국에

8) McAleve, Jane(2011), "Labor's Last Stand," *The Nation*, February 16, 2011.

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 노동기준인 최저임금을 없애거나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있는데 이는 대중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주단위에서는 주의 최저임금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철회하고자 하는 노력(5개 주)을 기울기도 했으며, 최저임금에서 생활비 상승을 없애거나(4개 주), 최저임금법 적용의 면제를 확대하거나 기준의 엄격함을 희석하고자 하는 노력(6개 주)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뻔뻔스럽게도 3개 주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아동노동 보호의 수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진보론자나 근로가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이 경제 및 공공정책의 그간의 틀을 무너뜨리는 물소떼의 무자비한 발길질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러한 참담한 정치적 상황을 접어두고 논하면,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반시설을 재건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투자, 녹색 일자리 부문 육성, 공립유아학교(Universal Pre-K) 설립, 교사, 홈케어 근로자 등 기타 중요한 서비스 근로자의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주에 보다 많은 재정 보조금 제공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모두는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존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21세기 경쟁경제를 위한 탄탄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기반도 마련되는 윈윈 해결책이다. 이러한 전략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사리에 맞는다 하여도(재계에서도 이 중 몇몇 안에 대해서는 호의를 표시하였다) 연방 차원의 정치는 아직 근처에도 가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희망의 빛은 있으며 이러한 희망의 빛은 대중에서 시작된다. 위스콘신의 시위는 미국 각지에서 노동계와 진보 지역사회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생활임금의 문제를 모두 중요시할 것을 요구하고 실업자를 위한 안정망 유지를 요구하는 조직 결성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이 민사회는 노동자의 권리 확립이라는 강력한 토대를 닦고 있으며 주단위와 시단위에서 임금갈취(Wage Theft)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법률단체에서는 주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6개 주 이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강화시키는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⁹⁾

9) 캠페인 웹사이트 참조. www.rebuildthedream.com, www.fightforafaireconomy.org, www.raisetheminimumwage.org

물론 문제는 이것으로 미국 정치판을 쥐고 있는 광기의 거품을 터뜨리고 일자리와 임금을 미국 국내 정책의 제1과제로 삼기에 충분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2차 경기침체를 피하는 당면 과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미국 건설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KL**

임금갈취 반대 캠페인은 다음 보고서 참조. Nik, Theodore, *The Movement to End Wage Theft*, Boston: Discount Foundation.